

‘불법감청 의혹’ 광주전파관리소 영상·대화 수집 매뉴얼 따랐다는데...

미래부·중앙전파관리소 “그런 매뉴얼 없다”

“영상없는 수집은 권한 밖” 밝혀 ...광산경찰, 범 위반 여부 조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광주일보 24일자 6면)과 관련, 경찰이 전파관리소를 상대로 관련법 위반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의 영장 없이 수일간 특정 인물들이 무전을 통해 나눈 대화와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수집한 것은 이들에게 허용된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24일 무전을 이용한 사기도박단 남모(36)씨 일당 적발 과정에서 광주전파관리소 측이 전파법(46조)에서 규정한 감시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감청을 했다는 의혹 제기기에 따라 전파관리소에 수사요청을 보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파관리소를 상대로 주파수를 이용한 탐지 및 대화·영상 수집의 방식과 보류한 장비의 능력과 합법성 여부도 가려

낼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전파관리소는 지난 22일 밤 광산경찰을 찾아 “이상 전파가 감지돼 사흘간 추적한 결과 광산구 우산동 모 숲집에서 무전기 및 몰래카메라, 이어폰 등을 이용한 사기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했다”면서 단속을 요청했다. 법원의 감청영장도 없이 무단 사찰에 걸쳐 수집한 자료 가운데 녹음 파일(44초)과 영상도 경찰에 제시했다.

불법 감청 의혹이 제기되자 전파관리소는 무전을 이용한 사기도박단의 대화 내용 및 도박 영상 수집은 전파법에 따른 적법한 업무로, 사전에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부인했다. 전파법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에 탐지, 측정, 포함되더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영상과 대화를 수집하는 것은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상 전파를 탐지하는 업무를 넘어선 영상, 대화 수집은 권한 밖이

전파관리소는

국가 핵심 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송통신환경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 기관이다. 중앙전파관리소와 위성전파감시센터, 광주 등 지방 10곳에 지방전파관리소가 있다. 주요 업무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 감청설비 단속 ▲혼신 전파 탐지 등 국내전파 및 국제전파 감시 ▲무선국허가, 검사 및 전파 사용자 징수 ▲불법 스펙 단속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방송사업자 관리감독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등이다.

므로 이를 다루는 매뉴얼 역시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광주전파관리소 측 해명을 부인했다.

전파감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도 “사기도박단 영상 및 대화수집은 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 탐지해 위치만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넘겨야지 의혹이 앞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불법 감청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전파관리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초 강릉경찰은 강원전파관리소가 수집해 건넨 도박 영상을 바탕으로 사기도박단을 검거했다.

시민들은 이번 감청은 사기도박단이었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감청할 수도 있다는 개인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정호 변호사는 “국정원도 법원의 영장 없이는 감청을 할 수 없는데, 전파관리소는 공공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감청을 자행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개인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전파관리소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규제 장치가 미흡하다면 범·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전파관리소 측이 전파를 이용한 무전 내용 및 카메라 영상 수집을 넘어서 더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능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 위치를 파악하고 대화 및 영상을 수집한 것뿐이다. 일반 우려와 달리 휴대전화, 일반 CCTV의 대화나 영상을 수집할 능력도 장비도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아파트 관리비 횡령에 돈 받고 일감 몰아주기

관리소장·입주자대표 등 13명 적발

순천경찰 특별 단속

관리비를 빼돌리거나 업자에게 돈을 받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저지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순천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아파트 관리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관리비 횡령·일감 몰아주기 등 고질적 비리를 저지른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공사업체 대표 등 13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아파트 관리소장 서모(70)씨는 아파트 운영비 통장을 관리하면서 2008년 1월25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3500만원을 인출해 횡령하고, 공사업체 6곳으로부터 공사 수수 대가로 27차례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가 주민들의 무관심과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되고 사용 내역이 불투명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이모(66)씨와 관리소장 전모(56)씨는 2012년 3월30

일부터 2013년 11월29일까지 보일러 공사 전문업체에 9900만원의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40차례에 걸쳐 직원 급여보조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아파트 관리소장 김모(54)씨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 320만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지급해 손해를 끼쳤고, D아파트 관리소장 하모(56)씨는 아파트 주차장 시설물을 부순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리비 109만원과 주차장 전등 교체 공사에서 발생한 고철 판매금 80만원 등 모두 189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또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실내장식업체들에게 고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가 주민들의 무관심과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되고 사용 내역이 불투명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조선대 총장 선출 방식

다음달 24일 결정될듯

이사회 의견 차이 못 좁혀

조선대 총장 선출 방식이 오는 3월 24일 결정될 전망이다.

조선대 이사회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총장 선출방식을 논의했으나 이사회 의견 차이 등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와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총장을 뽑는 간선제, 직선제와 간선제를 혼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이사회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이사회 때 이사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1988년 학내 민주화운동 이후 줄곧 총장 직선제를 틀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총장 선거 과정에서 다음 선거는 이사회가 임명하는 간선제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문화재 화재 진화 합동훈련 광주시 북구와 북부소방서 직원들이 24일 북구 매곡동 김동학 가옥(광주시민속자료 제3호)에서 문화재 화재 진화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인 돈으로 산 낚시배 몰래 매각 3억 챙겨

목포경찰은 24일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매입한 낚시 어선을 되팔아 수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53)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A

(여·60)씨에게 “낚시 어선으로 돈을 벌자”며 3억7900만원을 받아 9.7짜리 낚시 어선 1척을 구입한 뒤 몰래 되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A씨가 어선 구

입자금을 대면 자신이 배를 운영하고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어선을 몰래 매각하고 받은 3억 6000만원 가운데 3억원을 도박과 유증비 등으로 탕진하고 현금 6000만원을 자신의 차량에 숨겨뒀다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

어업 보상금 수익 빼돌린 어촌계장

베트남 도피했다 귀국

전남경찰청 추적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24일 어민들에게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 수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전 어촌계장 장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2012년 전남도가 발주한 신안군 하의도와 신의도를 잇는 연도교 개설 공사와 관련해 신안군으로부터 하의면 어촌계 어업권 소멸·피해 손실보상금 14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 중 어

촌계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한 4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 기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업체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또 기금 횡령 직후인 2013년 10월 베트남으로 달아나 2년간 체류하다가 지난해 10월 귀국해 전북 군산 등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숨어지내다 경찰의 추적에 탐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같은 어촌계 공동기금의 횡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취업 사기 4000만원 가로챈 경마 탕진...달랑 5000원만 남아



○...전 국정원 직원을 사칭,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쇠고랑.

○...2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58)씨는 지난해 7월22일 광주 동구 한 찻집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63)씨에

게 “국정원에 다닌 적이 있다. 아들을 대기업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A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4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김씨는 부산의 한 부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김씨는 A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모두 경마로 탕진하고 수중에는 단돈 5000원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불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제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낙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